

“전남도, ‘은퇴자마을 특별법’ 전략적 대응 나서라”

박종원 의원, 시행 1년 앞 촉구
10년전 ‘새꿈도시’ 추진 등 선도
“행정통합, 시범도시 최적 기회”



박 의원은 이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타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 창원군은 부곡온천 일

대에 ‘경남형 웰니스은퇴자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협의까지 진행했고, 강원 원주시·춘천시, 충북 제천시·단양군 등은 ‘전국 1호 은퇴자마을’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가 통합과 선거라는 과제에 집중하는 사이 타 지자체들은 우리가 먼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며 “담양군 역시 오래전부터 새꿈도시를 추진해 왔으나, 소규모 개발의 한계와 주택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1년은 과거의 선구자적 위상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다”며 전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다며 새꿈도시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는 새꿈도시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며 “지금의 은퇴 세대인 ‘베이비부머’ 들은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핵심 소비층으로, 이들이 정착하면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우리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눈물 흘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가족들이 피해자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 박 의원은 “전남도는 이미 10여년 전, 은퇴도시 조성사업 즉 ‘새꿈도시’를 추진했던 선도적인 지역으로 이번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10여년 전 선제적으로 시도했던 정책이 이제야 국가적 법안으로 통과돼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전남·광주 통합은 대규모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최적의 기회로, 중앙정부 역시 통합 상징성이 큰 지역을 시범도시로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남도는 지금 당장 타 지자체보다 앞서 공모 준비와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김문수 의원 “통합특별시 농어업 부시장 신설”

도정질문서 농어촌 대책 주문
농정예산 4조 로드맵도 요구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했음을 환기시킨 뒤 거대 도시중심의 행정체제 아래 농어촌이 고사하지 않기 위한 ‘3대 핵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농어업 전담 부시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전남 열린 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농어촌 소외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특례조항 상당수를 거부하고, 특히 전남 농어민들의 생명결과 같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조항이 삭제됐다”며 전남도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정통합이 단순

한 ‘3대 핵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전체 예산 중 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농어촌 예산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어업 예산 총량 보장제’ 마련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갖는 ‘농어업 전담 부시장 신설’ △현재 2조1천억원 규모인 농정 예산의 ‘4조원 시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이다.

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는 촘촘한 지원 조항이 담긴 반면 전남의 뿌리인 농수산업은 ‘조화로

운 발전’이라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며 “선출직 통합특별시장이 표심이 집중된 도시 현안에만 매몰될 경우 농어촌 소멸은 견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의료·문화 시설의 광구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군 단위 소멸 지역의 정주여건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최소서비스 수준 보장제’를 정치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통합의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보호장치를 세우는 것이 통합 성공의 전제”라며 “농어촌의 삶이 결코 통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여중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 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수사·기

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저와 원내에서 국민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 기자

도,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면접 준비 비용 등 50만원

전남도는 12일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이음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력이음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구직에 필요한 취업·면접 준비 비용 50만원이 지원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65세(1961년~1995년 출생)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는 여성, 여성농업인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경력이음바우처 카드는 신청 시군의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발급하고, 연말까지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취업 관련 자격증 강좌 수강,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재취업을 바라는 여성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하수구막힘/싱크대막힘/배관막힘

긴급출동 / 연중무휴 / 1년 A/S 무료

24시간 긴급출동!

당일 해결 보장!

- 물이안내려갈때
- 악취올라올때
- 역류할때

전문장비로 확실히 해결!

- 하수구막혔을때
- 싱크대/변기막힘
- 주방음식물막힘

화장실/싱크대 인테리어공사

지금바로 전화하세요! 깔끔한마무리

010-7110-2061

- 합리적인비용
- 빠른방문